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18일 (음력 11월 1일) 월요일

Photo 漫評

철새 대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들은 야당 대표라기보다는 철새 대표로 인식한다" 고 13일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옛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김성태 의원의 행보를 꼬집은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여 투쟁을 하겠다" 고 밝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성이) 첫번째도 투쟁, 두번째도 투쟁이라는 건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며 "야당의 역할은 더는 발목 잡는 '발목야당' 이 되면 안 된다" 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하태경

김성태

하태경

'형사처벌 면제 · 제보자 보상금' 5·18 양심고백 나올까

진상규명 특별법 조항에 포함 "용기 있는 제보 기다린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에 5·18 진상 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문제와 함께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암매장 등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심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 등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를 통해 5·18 진상규명에 협조한 당시 계엄군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 스스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진실일 경우 위원회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만약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

진상 규명에 중요한 증언과 진술을 하거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5·18단체는 '마지막일 수 있는 진상규명 조사에서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두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계엄군이나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5·18 당시 광주에는 3개 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3000여명을 포함해 20사단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등 2만명이 넘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다.

5·18단체의 요구가 진상규명 특별법 안에 반영되면서 5·18 당시 계엄군들의 제보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18단체 관계자는 "최근 암매장 발굴 조사에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당시 가해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어렵다" 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용기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한전KPS 광주 송변전 노동조합

박래원 위원장 '산업포장' 수훈

박래원 한전KPS 광주 송변전 노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가진 '2017년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자 정부 포상' 식에서 산업포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위원장은 지역 노사갈등조정 해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 영세 자영업자, 경력 단절여성, 취약계층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광주의 노동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20년간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시켜 분규 없는 직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다.

박래원 위원장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사의 상생협력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며 "오늘의 이 영광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광주지역 노·사·민·정 관계자들에게 돌린다" 고 말했다.

최남규기자

영 · 호남,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맞손'

9개 지자체, 오늘 국회서 포럼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건설을 위해 영·호남 9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게 될 9개 지자체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연다. 광주시, 대구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이 맞손을 잡고 마련한 행사다.

이들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9개 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 추진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박사가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를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가 '남부경제권, 달빛내륙철도가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로 한다.

2부 토론회는 김기혁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패널 8명이 참여해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조기 건설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9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서은홍 기자